

광주시, 전국 최초 도입 '현금 없는 시내버스' 순항

1천대 중 300대 현금함 철거
현금·계좌이체 이용률 0.5%
운전원 업무 완화 안전성 향상
모니터링 강화...서비스질 제고

광주광역시가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제도가 순항하고 있다.

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시내버스에 대해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재 7월까지 목표 102개 노선 1000대 중 36개 노선 300대의 현금함을

철거하는 등 도입률은 30%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노선 현금 또는 계좌이체는 0.5%로 지난해 1.9%, 올해 1월 1.6%, 3월 1.1%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어르신·금융저신용 승객 등의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선불교통카드 판매는 135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초기임에도 현금과 계좌이체가 크게 줄어 운전원 업무 부담이 줄고 안전운행 여건 등이 개선되고 있다. 시민들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통카드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광역시는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

버스업체와 소통협력,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배려, 광주G-패스 연계 현장 집중 홍보 등 꼼꼼한 준비가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현장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이나 운전원의 애로사항 등을 빠르게 파악해 적극 개선 중이다.

광주광역시는 앞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범운행을 하며 '현금없는 시내버스 제도'를 홍보하고, 시민 온라인 의견조사, 광주시의회,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TF팀 협의를 거쳐 재래시장, 노인타운 등을 후순위로 하는 노선별 순차 도입과 계좌이체, 선불교통카드 판매 등 현금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계좌이체의 경우 무입승차 방지와 요금입금 확인을 위해 탑승자 인적사항 기재 후 버스업체 계좌번호를 포함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선불교통카드 판매는 카드사와 협력해 어르신용 큰 글씨 안내서를 별도 제작하고 전용 콜센터 회선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무엇보다 운전원의 안전운행으로 현금 대체방법 안내와 카드판매는 반드시 정차

등 안전을 확보한 후 상세 안내문 배부 중심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운전원들에게 수시 교육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카드이용률과 계좌이체 회수율 추이, 시민 불편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좌이체 승객 인적사항 확보 간소화와 선불교통카드 판매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광주 G-패스 연계 현장 캠페인 등을 통해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였다"며 "시내버스 안전성, 정시성 등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삼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6월 3일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정보 키드뉴스
- 사전투표 철차 -
5월 29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매일 06시 ~ 18시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01 신분증 확인
→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생년월일, 사진 첨부)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 경로우대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병적기록부·복무확인서 등
•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
※ 모바일신분증은 앱 캡처본이나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꼭 앱 실행과정을 보여줘야함.

02 투표용지 수령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투표용지만 수령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수령

03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투표하기
아래 사례의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세요!!!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두 칸에 걸쳐 기표한 것	문자 또는 불명칭 기입한 것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서로 다른 칸에 두개 이상 기표한 것
1. 1칸 기표 2. 2칸 기표 3. 3칸 기표 4. 4칸 기표 5. 무효	1. 1칸 기표 2. 2칸 기표 3. 3칸 기표 4. 4칸 기표 5. 무효	1. 1칸 기표 2. 2칸 기표 3. 3칸 기표 4. 4칸 기표 5. 무효	1. 1칸 기표 2. 2칸 기표 3. 3칸 기표 4. 4칸 기표 5. 무효	1. 1칸 기표 2. 2칸 기표 3. 3칸 기표 4. 4칸 기표 5. 무효

04 투표함에 투표지 넣기
• 관내선거인은 관내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서 넣어주세요.
• 관외선거인은 관외사전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밀봉하고 넣어주세요.



차 없는 거리 '걷자일' 차 없는 거리 '걷자일' 행사가 지난 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려 시민들이 '탁구, 프로를 이겨라', 도로 바닥에 '분필아트' 등을 그리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전남도, 에너지산업 거점 조성 사업 본격화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심의 통과
신소재·IT산업기반 구축 등 역할

전라남도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달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계획 승인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전라남도가 역점 추진해온 에너지산업 거점 조성사업은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다. 양 기관은 총

368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주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2만㎡(36만 평) 부지에 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전라남도도에 따르면 사업은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기업투자 수요 부족 등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철회됐지만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의뢰해 통과됐다.

이후 2024년 6월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신청한 지 10개월만인 지난 4월30일 중앙심의를 통과해 올해 토지 보상 절차를 착수하고, 2026년 하반기 착공하는 등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나주시, LH,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여러차례 합동회의를 개최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사업 시행구역 결정, 보상계획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제도적·실무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했으며, 협업체계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의 초석이 됐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향후 에너지밸리 조성, 신소재 및 나노융합소재 산업 육성, 친환경 IT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지향적 산업 기반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관광숙박시설 민관합동 특별안전점검

전라남도는 최근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발생에 따라 소방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군과 함께 도내 관광숙박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6시56분께 완도 소재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가 객실 내부로 유입돼 투숙객 1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신속한 구조 조치로 당일 오후 모두 호전돼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내 관광숙박시설 421개소와 일반숙박시설 2200여 개소, 집중안전점검 대상인 어린이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과 판매시설 등 1500여 개소에 대해 가스·전기·소방시설 등 분야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시군과 소방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공사,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객실 내 가스·전열 기기 안전상태 △비상대피 동선 △소방시

설 정상 작동 여부 △가스누출 및 경보기·비상차단장치 작동여부 등이다. 특히 100객실 이상 보유 관광숙박시설 19개소의 경우 도와 시군, 소방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5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소규모 402개소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향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중대한 결함은 사용금지·철거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숙박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